

# 건설CALS와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보상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방안

서명배\*, 김남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보연구실  
e-mail:smb@kict.re.kr

## Method of Transparency Guarantee for Compensation Budget expenditure using Connection of Construction CALS and dBrain

Myoung-Bae Seo\*, Nam-Gon Kim\*

\*Construction Information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 요 약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건설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제15조의 2에 따라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1998년부터 건설사업정보화(Continuous Acquisition Life-Cycle Support : CALS)를 추진중에 있다. 건설사업정보화의 일환으로 건설공사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개인의 소유권과 관계되어 있어 민원 소지가 많은 보상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용지보상시스템이 개발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보상비 지출의 핵심과정인 지급단계가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별도로 운영중에 있어 체계적인 보상자료 관리 및 보상비 지급의 이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곧 부적절한 보상비 집행으로 인한 국고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고 보상비 집행에 대한 대민 신뢰도 저하로 인해 다수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기존의 보상비 집행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건설CALC 용지보상시스템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보상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인들에게 대민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서론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건설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제15조의 2에 따라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1998년부터 건설사업정보화(Continuous Acquisition Life-Cycle Support : CALS)를 추진중에 있다. 건설사업정보화(건설CALC)를 통해 도로와 하천사업을 중심으로 건설사업 전단계의 Life-Cycle에 걸쳐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용지보상시스템, 건설인허가시스템, 건설CALC포털시스템 등 총 5개의 시스템이 개발되어 운영중에 있다.[1]

이중 용지보상시스템은 본부 및 산하기관에서 연간 9,086억('09년 기준) 규모의 용지보상업무 수행시 사용되고 있으며 용지취득을 위한 전과정(조서작성, 감정평가의뢰 및 결과수신, 계약서작성, 수령인작성 및 관리)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관리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업무담당자 일인당 담당하는 보상대상 공사가 과다하고 관리되는 서류가 많아 관리감독이 허술하여 보상업무 담당자들이 문서의 위변조를 통해 보상비를 불법으로 지급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보상업무 지급 프로세스 개선 및 건설CALC 용지보상시스템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igital-Brain :

dBrain)과의 연계를 통해 보상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보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국토해양부 보상업무 현황

국토해양부에서 진행하는 공익사업 편입 토지·물건 취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절차에 따라 토지·물건조사→보상계획공고→감정평가→협의→계약체결→수용의 단계로 진행된다. 이러한 보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권역별로 산하에 5개 지방청을 구성하고 보상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표 1>에서도 알수 있듯이 '09년 기준 보상비의 집행 규모가 16,712,000㎡의 토지를 대상으로 9,000억이 집행되었지만, 보상업무 담당자는 5개 기관에서 약 60여명 수준으로 일인당 연간 보상집행비가 150억에 이르고 있다.[3][4]

<표 1> 국토부 산하 5개 지방청 보상실적(단위:천㎡, 억원)

구분	계		2009		2008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계	28,881	16,626	16,713	9,086	12,168	7,612
서울청	3,254	4,295	1,613	2,316	1,641	1,979
부산청	11,722	7,130	6,036	3,667	5,686	3,463
대전청	6,032	3,635	3,680	2,106	2,352	1,529
익산청	5,974	1,171	4,151	710	1,823	461
원주청	1,899	467	1,233	287	666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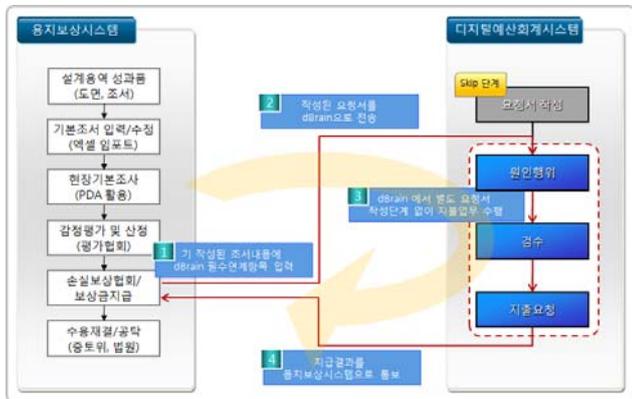
### 3. 보상비 불법 집행사례 및 원인 분석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들이 이처럼 인적으로 매우 취약한 실정에 노출되어 있고, 관리자도 담당해야 할 공사수가 많아 체계적인 관리감독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최근 일부 기관에서 보상대장 및 등본 등을 위조해서 보상금액을 증액하거나 지인 등을 통해 보상금을 받게 하는 등 후진적 보상비리가 발생하였다.

보상담당자들은 보상진행현황을 관리하기 위해 용지보상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나, 용지보상시스템은 보상관련 자료를 대장형태로만 관리하고 있고 실제 보상비 지출과 관련된 자료는 기획재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관리함에 따라 양 시스템간의 정보가 단절됨으로써 보상진행시 발생하는 각종 대장이나 문서의 내용과 지급결과가 달라도 이력추적이 어렵다. 이는 결국 부적절한 보상비 집행시 사후추적이 어려워 보상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 3. 연계를 통한 보상비 지출업무 개선

현재 국토해양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보상담당자는 용지보상시스템에 기본조사, 평가, 산정, 지급자료를 입력하고 보상비 지급을 위해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보상비 지급 요청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연계기능 개발이 완료되면 (그림 3)과 같이 보상담당자는 용지보상시스템에서 보상비 지급요청서를 작성하여 dBrain에 전송하며, 기존의 dBrain상의 지급요청서 작성단계는 생략된다.



(그림 1) 연계 후 변경된 보상비 집행과정(To-Be)

또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에서도 연계에 따른 지출업무 프로세스 변경이 발생한다. 기존에 용지보상지출시복식부기에 따른 부동산계약에 따라 조달관리, 지출관리, 조달관리, 지출관리에 따라 10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연계가 됨에 따라 조달관리의 3단계가 “요청” 한단계로 간소화 된다. 용지보상시스템을 통해 자료가 전송이 되면서 지출요청서가 자동 생성이 되기 때문에 조달관리 단계가 연계로 인해 자동스킵이 가능하다. 또한 조달관리 단계도 대금지급요청서 자동생성에 따라 기존 3단계가 “검수” 한단계로 간소화 된다.

구분	조달관리	지출관리	조달관리	지출관리
부동산계약	요청 → 요청승인 → 계약	원인행위	공사 → 검수 → 대금지급	지출요청 (대금지급) → 지출결의 → 계좌이체
용지보상지출요청	요청 (계약서 자동생성 및 거래스캔)	원인행위	검수 (대금지급요청서 자동생성 및 거래스캔)	지출요청 (대금지급) → 지출결의 → 계좌이체

(그림 2) 부동산계약과 연계를 통한 용지보상지출요청 비교

보상비 지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용지보상시스템으로 보상지출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로는 각종코드정보, 예산정보, 계좌이체정보, 실명정보, 이체결과 등이 있으며 이를 Source와 Target으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연계항목(군)에 따라 연계상세항목은 달라진다.[2]

<표 2> 용지보상시스템과 dBrain 연계목록 도출

연계항목(군)	Source	Target
일선관서코드	dBrain	용지보상
용지보상 요청수신	용지보상	dBrain
진행상태송신	dBrain	용지보상
기본정보확인 요청수신	용지보상	dBrain
기본정보확인 요청응답(*)	dBrain	용지보상
잔액조회 요청수신	용지보상	dBrain
잔액조회 요청응답(*)	dBrain	용지보상
실명계좌확인 요청수신	용지보상	dBrain
실명계좌확인 요청응답(*)	dBrain	용지보상
계좌이체결과(지급결과)	dBrain	용지보상

### 5. 결론

용지보상시스템을 통한 보상비 집행체계의 일원화에 따라 평가 및 산정금액 수정 등 보상 전단계의 이력관리를 통해 부적절한 보상비 집행시 사후추적이 가능하여 장기적으로 보상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가능하며, 보상비지출자료의 이중입력 방지 및 보상비지급 통계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통한 보상담당자의 업무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계방안 설계 후 결과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중입력 방지에 따라 지출요청서 작성 시간이 단축(2시간 → 10분, 100건 기준)됐으며, 자료 검색시 계약정보와 지급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어 각종 통계자료 집계시간이 단축(1건당 1시간 → 5분)되는 걸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지자체나 중앙부처에서 용지보상시스템 개발시 본 논문에서 제시된 연계방안 및 항목들을 참조하여 개발하면 보상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1] 09 건설CALIS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2010.5  
 [2] 디지털예산·회계개발사업단, “dBrain 디지털예산·회계이해”, 2007, 기획예산처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3] 정진용. 알기쉬운 공익사업과 토지보상. 2010.1. 부연사  
 [4] 토지수용 업무편람. 2009.1. 중앙토지수용위원회.